

산안법 전부개정안 노사 입장차 '뚜렷'...쟁점과 전망은?

개정안 작업과정서 노사 양측 의견 부족해 '아쉬움' 노사, 처벌·도급금지·작업중지 등 쟁점으로 주목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노사 양측의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가 개정안 작업 과정에서 노사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뒤늦게 자신들의 안을 개정안에 반영키 위한 양측의 경쟁이 압박되고 기간 중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계 전반의 관심이 높다. 산안법이 개별 사업장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탓에 개정안이 담을 내용과 범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본지는 개정안과 관련해 대척점에 선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과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 각기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이들의 시선으로 쟁점 사항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개정안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안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전부 개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이하 전승태 팀장)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중대 산재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 크레인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해진 측면도 있다. 다만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지라도, 공개된 개정안 조문이 지나치게 노동계의 입장에 따라 수립된 경향이 강하다. 전부개정안의 법적 지위와 과급력을 고려하면, 개정안 작업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전에 합의점을 마련했을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이하 최

명선 실장) 전부개정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보더라도, 이번 개정에는 기존 법안보다 혁신적인 내용이 담긴 게 사실이다. 특히 변화한 고용 형태에 맞춰 다양한 노동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킨 건 상당한 진전이라 평가한다. 다만 법안 수립 과정에서 이 법의 제1차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고용부가 절차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노력을 해주길 기대한다.

◆개정안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하청·외주화에 따른 문제점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조문의 내용을 두고 노사 간 의견이 분분하다.

전승태 팀장 가장 큰 쟁점은 '하청형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뒀다는 점이다. 개정안 제172조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현행 산안법이 이미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처벌의 소지가 다분하다. 또 사업주가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모두 준수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울러 공포 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갈린다. 도입 취지와 달리 법원에서 판사들이 부담을 느껴 오히려 징역 판결

이 안 나올 것이라 얘기도 있다. 다각도로 고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명선 실장 현재 산안법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하청형이 없어 사실성 실효를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하청형의 도입을 요청해왔다. 이 조문은 그간의 주장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법과 비교해 형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해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어불성설이라 생각한다. 미국 등 산재 예방 선진국의 경우엔 처벌의 강도가 더 높다. 산재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확실히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규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주들이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급·재하도급 금지 또한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 고용부 안만 놓고 보면 적용 대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승태 팀장 개정안 적용 시 적용대상은 22개 사업장 852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는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다만 이 법이 공포됐을 때의 향후 과급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개정안이 직종별로 나열식으로 도급대상을 정해 놓은 만큼 앞으로 적용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번 법은 '빚장'에 가까운 것이다. 또 막연히 법만으로 도급



전승태 팀장



최명선 실장

고 생각한다.

◆작업중지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전승태 팀장 그동안 작업중지 지침이 운영돼온 상황을 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산재 예방보다도 제재 목적에 맞춰 지침이 활용돼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지침을 법적 근거를 두기 전에 산재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했던 게 아닌가 싶다.

과급 효과가 크다는 점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경영계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작업중지를 받은 4개 사업장에서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데 21일이 걸렸고, 그에 따른 손실액은 600억~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품·소재 등 여러 산업이 연계된 제조업의 특징을 고려하면 작업중지는 단일 사업장의 제재에서 그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최명선 실장 그간 고용부 지침이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 산재가 빈발한 시점에만 시행이 강화된 경향도 있고, 일단 시행이 돼도 작업중지·안전관리·해제 등 일련의 절차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은 법적으로 작업중지를 정식화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다만 이 법이 효과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외국어의 작업중지 관련 법령에서는 작업 대피·거부권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절차와 규정을 통해 작업거부권을 보호하고 있다. 김광국 기자 kimgg@

특허·아이디어 가공·변경해 이득 취하는 부정경쟁행위 처벌

홍의락 의원,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제출

특허나 아이디어를 탈취·도용·가공·변경해 이득을 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우위에 놓여있는 자가 중소기업의 특허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아이디어(출원 중인 특허, 무효판결이 확정된 특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 등의 과정을 거쳐 취득한 뒤 이를 가공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이익을 크게 얻으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해당 특허권자나 아이디어 제안자는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타인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참신한 특허나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공해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 특허나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

구하고 해당 특허나 아이디어의 보호에 대한 법적근거가 제대로 없어서 행정당국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실령 이에 대한 분쟁이 제기돼도 시간과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법원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보호받을 길이 없어 그러한 사법적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특허권자나 아이디어 제안자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이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포함된 기술 등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현행법상의 시정명령제도 뿐만 아니라 특허청장이 아예 위반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까지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들을 제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정상의 큰 걸림돌로 간주하고 그 해결책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 통과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

1면서 계속 외형성장 '뚜렷'...수익성은 '악화'

에너지 기업 중에서는 가스 및 석유 관련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력 분야는 전년보다 조금 나빠졌다.

특히 공기업들의 성적은 다소 저조한 반면 민간 기업들의 성적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의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 면에서 큰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역난방공사도 영업이익, 순이익이 줄어 들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글로벌 태양광 보급 확대와 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국내 대형건설사들은 지난해 주택 시장 호황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였으나 SOC 예산 감축·해의 수주 악화 등으로 인해 올해까지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면서 계속 정산조정계수 10년 만에 '손본다'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점차 낮춰야 하는 상황인데,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한수원 등 발전자회사의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함으로써 마진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발전회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뜰이나 발전소 이용률이 떨어지고, 친환경설비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한전의 당기순이익을 보장

해주기 위해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수는 "이번 TF가 사실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산조정계수를 폐지하는 대신 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정부가 조기에 에너지전환 성과를 창출하고,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를 막기 위해선 시간이 촉박한 것 같다"며 "앞으로 전력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LNG발전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정산조정계수제도보다는 계약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18회 한국전기문화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가로등 보안등 자동점멸기

GPS 가로등 자동점멸기
【2회로/4회로/6회로】

양방향 가로등 자동점멸기
【4회로/6회로】

전자식 보안등 자동점멸기
【일반형/콘센트】

GPS 보안등 자동점멸기
【일반형/고급형】

방수형

“가로등 접속함”의 선두주자!

누전차단기 방수함
MSB-100

누전차단기 방수함
MSB-200

강전보유기
MS-500

방수형 접속함
LTB-700

격동용 직선접속재
LJB-100

방수형 단자함
MS-210

실리콘 절연편
MS-1/2/3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284 (금정동 한림벤처타운 108호)
Tel 031-451-4147~8 / Fax 031-427-4147
www.misung901.com

순이익 면에서 큰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역난방공사도 영업이익, 순이익이 줄어 들었다.

해주기 위해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